



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 경제가 성숙할수록 총수요의 안정성을 위해 민간소비의 뒷받침이 중요하나 우리나라는 민간 소비 비중이 2000년대 들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본고는 민간 소비 둔화의 원인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990~2016년 우리나라 도시 가구의 가구 주 연령별 저축률 추이를 파악해보고자 함
- 우리나라 도시 가구의 경우, 전체적으로 40대 가구의 저축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2010년대에 들어서는 50대 및 60세 이상 가구의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40대 가구의 높은 교육비 부담이 연령별 저축률 차이를 왜곡하는 현상을 감안하기 위해 ‘교육비 보정 저축률’을 산출하여도 50대·60세 이상 가구의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각 세대의 저축률이 10년 후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를 파악한 결과, 40대가 10년 후 50대에, 50대가 10년 후 60세 이상에 저축률을 상승시키는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에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40대 이후 고령으로 갈수록 저축률을 상승시키는 현상은 특정 세대부터 주도되었다기보다는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다수의 세대에서 동시에 시작된 것으로 보임
-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노후소득 여건으로는 대표적으로 금리 하락을 들 수 있는데, 일정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산(원금)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노후에도 저축을 우선하는 현상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회사채(장외3년 AA-) 기준으로 금리는 1990년 16.48%, 1998년 15.10%에서 2019년에는 2.02%까지 하락하면서 이자소득 여건이 크게 악화됨
 - 금융투자상품이나 부동산 임대 등의 경우 시장 및 제도 리스크가 커, 대체소득원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대수명의 증가도 필요노후자산의 규모를 확대시켰을 가능성이 높음
 - 고령층 저축률 상승 현상이 노후에 예상되는 경제 여건에 대한 불안에 기인한 것이라면, 보험산업은 즉시연금이나 노인건강보험과 같이 고령에 가입하는 노후위험 대비 상품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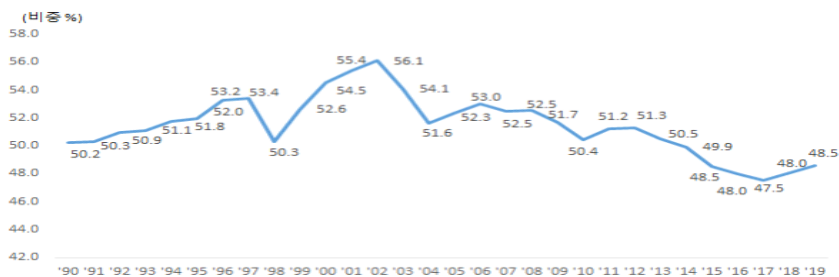
1. 검토배경



■ 경제가 성숙할수록 총수요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수출이나 투자보다는 국내 수요 특히 민간소비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나,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경제 성장 초기에는 투자 재원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축이 미덕’인 경우가 많으나, 경제가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 최종 수요로서 소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소비가 미덕’인 경우가 많음
- 우리 경제의 경우 전체적으로 성장해왔으나 만성적인 내수 불황이 지속되면서 전체 GDP 규모에 비해 민간소비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그림 1) 참조
 - GDP에서 가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56.1%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2014년 이후에는 50% 미만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그림 1〉 GDP 대비 민간소비지출의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 계정」

■ 본고는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률 변화를 연령별·세대별로 파악함으로써 고령 가구의 저축에 대한 행태 변화를 파악해 보고자 함

- 이론적으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저축을 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고령에 소비를 늘리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저축 행태로 알려져 있음
 - 따라서 저축률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높아졌다가 고령이 될수록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본고는 우리나라의 가구의 저축률의 변화가 상기의 일반적인 기대에 부합하는지, 특별한 변화가 있다면 특정 시점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세대에서 비롯된 것인지 파악해보고자 함

1) 동기간 (2002~19년) 중 주요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의 비중은 일본(55.9%→55.2%), 미국(67.1%→68.0%), 독일(55.7%→52.3%), 프랑스(54.0%→53.7%), 영국(66.0%→64.8%)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본고는 저축률의 추이를 연령별·세대별로 파악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의 도시 지역 가구의 저축률(흑자율)²⁾을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음

- 연령별·세대별 저축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주 연령별 가계 수지 자료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도시 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한 1990~2016년 자료가 가장 유용함³⁾
- 따라서 도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 연령을 기준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등 4개 집단으로 나누고, 연령별·세대별 저축률 추이를 논의하였음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 우리나라 도시 가구의 경우 전체적으로 40대 가구의 저축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2010년대에 들어서는 50대 및 60세 이상 가구의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그림 2) 참조

-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의 저축률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2004년 전후)부터 타 연령대 대비 상승하기 시작해서 2010년대에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2〉 도시 가구의 연령별 저축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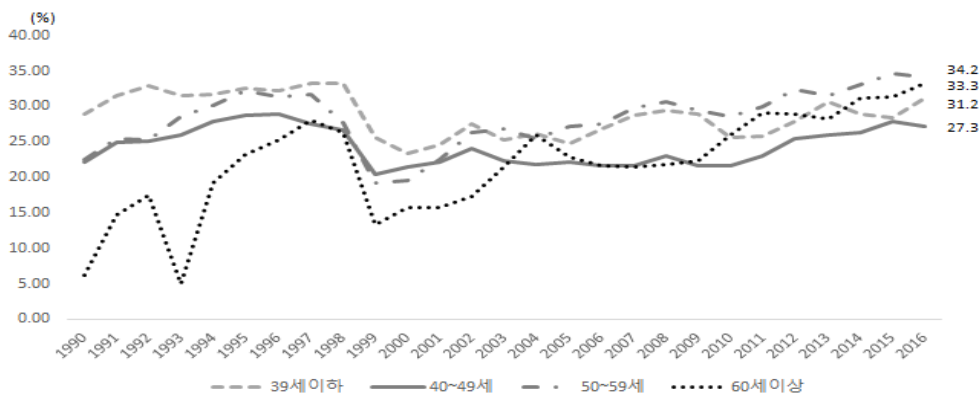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기초로 산출함

- 2) 본고의 저축률은 「도시가계조사」의 흑자율임. 우리나라 가구의 저축률로 인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도시가계조사」의 흑자율과 「국민 계정」의 가계 저축률이 있음. 전자는 미시적인 가계부 형태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후자는 거시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작성됨. 기본적으로 가처분소득(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이나 소득창출을 위한 비용(이자 등)의 포함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어 저축률 수준의 일대일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 3) 전국 단위의 가구주 연령별 조사는 2003년 이후부터 시계열이 존재하며, 도시지역 가계도 2017년, 2018년에는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이 분리·조사되어 흑자율(저축률) 산출이 불가능함

- 반면, 40대 가구의 저축률은 2000년대 들어 타 연령대 대비 확연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장 높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0대 가구의 저축률은 2000년대 들어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고령층인 60대 이상 가구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가계 저축률은 30·40대보다는 50·60대 이상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2016년 기준: 60대 이상 33.0%, 50대 31.8%, 40대 23.4%, 39세 이하 29.45%)
 - 40대에서 저축률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교육비 부담에 기인한다는 견해도 많기 때문에 연령별 저축률의 차이를 논의할 때는 교육비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2016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교육비의 비중을 보면 40대 가구의 경우 14.3%로 나타나 50대 6.9%, 39세 이하 5.5%, 60세 이상 1.0%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교육비 부담을 보정하여 저축률을 산출하여도 우리나라 50대 및 60세 이상 가구의 저축률은 30·40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그림 3) 참조

- 교육비를 조세나 사회보험료와 같이 강제되어진 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비소비지출에 포함하여 연령별 저축률을 재산출하였음⁴⁾
- 교육비를 보정하여 저축률을 산출할 경우, 교육비 비중이 높은 40대와 50대 가구를 중심으로 보정 이전에 비해 높아지게 됨(2016년 기준: 40대 23.4%→27.3%, 50대 31.8%→34.2%)

〈그림 3〉 도시 가구의 연령별 ‘교육비 보정 저축률’ 추이



자료: 「가계동향조사」를 기초로 산출함

4) 저축률 산식은 $\frac{(\text{처분가능소득} - \text{소비지출})}{\text{처분가능소득}}$ 이지만, ‘교육비 보정 저축률’은 교육비를 조세와 같은 비소비지출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산식은 $\frac{((\text{처분가능소득} - \text{교육비}) - (\text{소비지출} - \text{교육비}))}{(\text{처분가능소득} - \text{교육비})}$ 로 수정됨

- 그러나 교육비 보정에도 불구하고 50대 및 60세 이상 가구가 40대 및 39세 이하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률을 보이는 현상에는 변화가 없음
 - 특히, 조사 표본이 전면 개정된 2019년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도시 가구의 ‘교육비 보정 저축률’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39세 이하 28.9%, 40대 25.6%, 50대 32.9%, 60세 이상 31.8%로 나타나 고령 가구의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50대 가구와 더불어 사실상 은퇴연령이라 할 수 있는 60세 이상 고령 가구의 저축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들 가계의 소비 활동이 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저조함을 의미함
 - 특히, 60세 이상 가구의 소득 수준은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 2016년 기준 60세 이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286만 원(교육비 보정: 283만 원)으로 50대 437만 원(405만 원), 40대 424만 원(366만 원), 39세 이하 376만 원(357만 원)에 비해 현저히 낮음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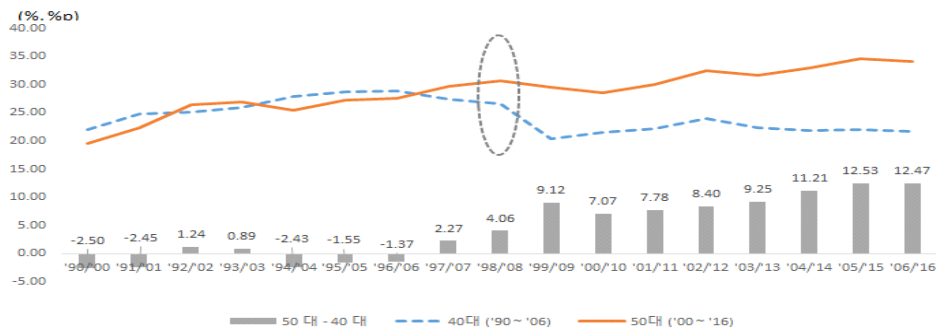


- 고령화될수록 저축률이 상승하는 현상이 언제, 어느 세대에서 시작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령대의 차이만큼 시차를 두고 저축률의 변화를 살펴보았음
 - 예를 들어, 1990년의 40대와 50대 가구의 저축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인 2000년의 50대 가구와 비교함으로써 1990년 40대가 10년 후 어떠한 저축률을 나타낼지 논의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고령 가구의 저축률 상승현상이 특정 세대에서 시작된 것인지, 특정 시점에 여러 세대에서 동시에 시작된 것인지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시계열이 1990~2016년으로 27년에 불과해 충분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논의를 ① 40대와 10년 후 50대 가구의 저축률 변화, ② 50대와 10년 후 60세 이상 가구의 저축률 변화로 나누어 전개함
 - 우선, 1990~2006년의 40대 가구의 저축률과 10년 후인 2000~2016년의 50대 가구의 저축률을 대비하여 보았으며, 다음으로 1990~2006년의 50대 가구의 저축률과 2000~2016년 60세 이상 가구의 저축률을 비교함으로써 연령대 상승에 따른 저축률의 변화를 살펴봄
 - 본장의 저축률 개념은 전장에서 산출한 ‘교육비 보정 저축률’을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음

■ 40대 가구의 10년 후 저축률 변화를 파악해 본 결과, 대략 1998년부터 10년 후 50대 저축률이 상승하는 현상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그림 4) 참조

- 1998년까지는 40대 가구의 저축률이 10년 후 등락하는 등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1998년부터는 10년 후 상승하는 현상이 명확해지면서 2004년 이후에는 상승폭이 10%p 상회하고 있음
 - 1998년 40대 가구와 2008년 50대 가구의 저축률의 차이는 4.06%p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확대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2006년 40대와 2016년 50대 가구의 저축률의 차이는 12.47%p에 이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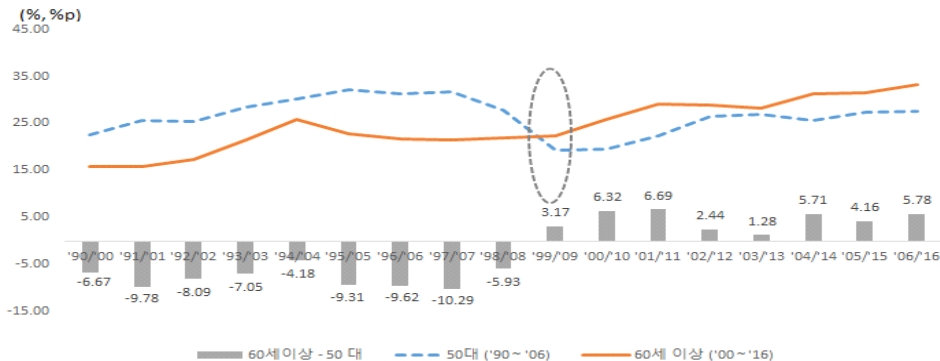
〈그림 4〉 40대('90~'06)와 50대('00~'16) 가구의 저축률 비교



자료: 「가계동향조사」를 기초로 산출함

■ 1998년 이전에는 50대 가구의 저축률이 10년 후에 하락하다가 1999년 이후에는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며, 이는 고령에 저축률이 상승하는 현상이 1998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해서 다수 세대에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함(그림 4), (그림 5) 참조

〈그림 5〉 50대('90~'06)와 60세 이상('00~'16) 가구의 저축률 비교



자료: 「가계동향조사」를 기초로 산출함

- 1997년까지는 50대 가구의 저축률이 10년 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노년에 저축보다 소비를 한다는 논리에 부합하는 현상이 나타났음
 - 그러나 1998년 50대 가구의 10년 후 저축률이 3.17%p 더 높게 나타나면서, 이후에는 60세 이상 고령에 더욱 적극적으로 저축을 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0대 가구와 50대 가구가 10년 후 저축률을 높이는 현상은 각각 1998년, 1999년으로 유사한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외환위기를 계기로 50대 이후에 저축을 확대하는 현상이 다수의 세대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10년 후 저축률을 상승시키기 시작한 1998년 40대와 1999년 50대는 사실상 완전히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세대가 노년 저축률 상승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4. 시사점



- 우리나라 도시 가구의 연령별 저축률은 50대 이후 고령층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내수기반을 확보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가구의 저축률이 타 연령대 대비 높아지면서, 소득이 높을 때 저축하고 노년에 소비한다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크게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고령층이 경제활동기에 축적한 자산과 사회복지기금 등을 바탕으로 소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축을 우선한다면 고령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고령 사회에서 내수 기반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임
-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고령층의 저축률 상승은 자산 수익률 하락, 기대 여명 증가 등에 따라 필요한 노후자산의 규모가 증가한데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 고령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심화되었다면, 외환위기를 전후로 달라진 노후소득 여건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임
 - 고령 가구의 저축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유산 상속’, ‘사회안전망 미비’, ‘자녀 결혼비용 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고 있으나, 이들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특별히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본고는 상기의 원인 이외에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하락한 금리수준을 고령 가구의 저축률을 상승

5) 홍기석 외 1인(2018. 12), 「고령인구의 저축 실태와 거시경제적 함의」, 국회예산정책처; 윤상하(2005. 12), 「50대 이후 저축률 상승의 배경과 영향」, LG주간경제

시킨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하고자 함

- 이자소득은 고령 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소득원이라 할 수 있으나,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그만큼 더 많은 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 것으로 판단됨⁶⁾
- 대체 자산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이나 부동산 임대외의 경우, 우리나라는 시장 및 제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으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수명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후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산 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했을 가능성도 높음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1990년 71.7세에서 2018년에는 82.7세로 급속히 상승하였음
- 고령층 저축률 상승 현상이 노후에 예상되는 경제여건에 대한 불안에 기인한 것이라면 보험산업은 즉시 연금이나 노인건강보험과 같이 고령에 가입하는 노후위험 대비 상품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kiqi**

6) 회사채(장외3년 AA-) 기준으로 연평균 금리 추이를 보면 1990년에는 16.48%, 1998년에는 15.10%를 기록했으나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1999년에는 8.86%, 2019년에는 2.02%까지 낮아짐